

“커버드콜 ETF, 총수익 하락 우려 투자원금에서 현금 당겨받은 셈”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자간담회

커버드콜 ETF 고분배 경쟁 비판
1만원 투자, 분배금 1500원 받으면
순간 ETF 가격 8500원으로 하락

“당장에 높은 분배율에 치중하면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격입니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 부문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고분배 경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고분배 상품을 쫓다보면 시장 상승을 못 따라가 총수익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자들이 ETF 분배금을 기업의 배당과 동일하게 착각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오니 마치 배당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만원을 투자한 ETF에서 1500원의 분배금을 받으면 투자자는 ‘1500원을 벌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순

간 ETF 가격은 8500원으로 떨어진다. 자산의 총가치(기준가+분배금)는 그대로인데 현금만 앞으로 당겨 받은 셈이다. 이처럼 ETF 분배금은 기업 이익에서 나오는 배당과 달리 옵션 매도 프리미엄이나 원금 일부에서 충당될 수 있어, 기초자산이 오르지 않으면 결국 원금이 깎여 나가게 된다. 금융감독원도 “분배형 ETF의 실제 손익은 분배금과 기준가 변동을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병호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 운용본부장도 과열된 분배 경쟁의 위험성을 수치로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프리미엄을 많이 쫓다보면, 분배율을 많이 쫓다보면 옵션을 많이 팔 수밖에 없고, 이는 금감원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 상승을 따라가는 것이 단순히 기본 좋은 일 이 아니라,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2030년 6월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 도달한다고 해도 20% 분배율은 감당할 수 없고, 최소 9000포인트는 가야 유지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코스피 200

의 지난 2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약 8% 수준이지만, 국내 커버드콜 ETF의 평균 분배율은 17%에 달해 장기 원금 훼손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운용은 이날 간담회에서 적정 분배율로 7%를 제시하고 신규 라인업을 공개했다. 코스피200 지수를 기반으로 한 ‘TIGER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ETF’와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위클리커버드콜ETF’로 오는 23일 상장한다. 전자는 연 7% 분배율, 후자는 주식배당을 포함해 연 10~12% 수준의 분배율을 목표로 하며, 각각 매월 15일과 말일에 분배돼 투자자는 격주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커버드콜의 원래 목적은 오랫동안 모은 연금을 인출해 은퇴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며 “20·30세대가 연금을 적립하는 시기에 커버드콜 상품은 적합하지 않고 투자자분들께 적절한 분배율의 의미, 7%로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 및 직원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앞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 금소원 분리 등 철회하라”

금감원 직원 1200명 옥외집회

“금소원 분리 결사반대”, “관치금융 중단하라”

금융감독원 직원 1200여 명이 18일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모였다.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직원들이 옥외집회를 연 것은 지난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 이들은 “합리적 논의가 생략된 채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에 역행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리적 논의 생략, 졸속 입법
금융시장 안정성 해치는 결정”

“감독-소비자보호 불가분 관계
분리면 오히려 금융사고 위험”

이날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 개편안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재부의 하위기관으로 전락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태완 비대위원장은 “오늘의 집회는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외침”이라며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를 분리하면 오히려 금융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해외 사례도 들었다. 영국은 2000년대 초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해 운영하다 대형 보험사 파산과 금융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결국 제도를 다시 통합했다. 호주 역시 초대형 보험사 HIH 파산, 연금운용사

트리오캐피탈 금융사기 등으로 감독기관 간 책임소재 불분명, 정보공유 단절의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 해외 사례는 정부안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이 참석해 의견을 보냈다.

직원들의 자유발언은 관료집단 비판으로 이어졌다. 한 직원은 “책임지지 않는 ‘모피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모두 장악하려 한다”며 “서민의 금융안전을 외면하는 관료들에게 금융감독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재경분리라는 구호는 달콤하지만 결국 독약이 될 것”이라며 “서민이 짊어질 청구서는 늘어나고 관료들은 책임을 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또 개편안을 주도한 인사로 김은경 전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목했다. 이들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합리적 논의가 생략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김 전 처장 등 국정기획위 인사들과 각계 전문가, 금감원 직원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민주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통령과 국회를 향한 주문도 나왔다.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에게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감원 업무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짧지만 강렬했던 45분간의 집회는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허정윤 기자

리얼티파인 ‘미래투자’ vs 머스트자산 ‘주주환원’

리파인, 1·2대 주주간 갈등 고조
24일 ‘자본준비금 감소 건’ 임시주총

코스닥 상장사인 리파인을 두고 1, 2대 주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대주주 리얼티파인은 미래 투자에 방점을 두는 반면, 머스트자산운용은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리파인은 오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자본준비금 감소 건’만을 다룬다. 안건은 머스트자산운용 측이 요구한 것이다. 머스트자산운용은 리파인의 자본준비금 약 858억원을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 전입할 것을 주장한다.

자기자본을 주주환원에 활용하면 자

기자본이익률(ROE)를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편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지난 1일 공개서한에서 “리파인의 재투자가 거의 필요 없는 사업모델을 고려할 때 500억원의 자기자본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며 “과도하게 쌓인 자본을 주주환원에 활용해 ROE를 40~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사실상 대규모 배당을 챙기려는 속셈이란 게 금융투자업계 시각이다.

최대주주인 리얼티파인 컨소시엄의 생각은 다르다. 명분 약한 대규모 주주환원 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인수·합병(M&A) 등 신사업 투자에 돈을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리얼티파인은 스톤브릿지캐피탈과

LS증권이 손을 잡은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리파인 구주 약 34%를 1603억원에 인수했다. 이어 리파인의 자사주를 기반으로 발행된 355억원 어치 교환사채(EB)를 인수하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추가로 13% 지분을 취득했다.

회사측은 EB로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리얼티파인 관계자는 “기존에도 1300억원의 현금이 확보돼 있었지만,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신사업 추진과 M&A 등 사업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 성장 도모를 위해서는 자금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투자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주주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회계투명성 위한 첫 걸음”

한공회 ‘지역투명성위원회’ 출범
50개 지역 858명 공인회계사 참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7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전국 단위의 회계투명성 강화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 함께 누리는 신뢰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 접목시키는 데 방점을 뒀다.

출범식은 위원장 출범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하, 외빈 축하, 위촉식, 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소영철·허훈·정지웅 서울시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전국 각 지역 회계사 위원들이 위촉장을 수여받고 공



지난 17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열린 ‘지역투명성위원회’ 출범식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윤열 회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지역투명성위원회 지역위원장 및 위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식 활동을 시작했다.

최윤열 회장은 “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닌 회계투명성을 공익으로 환원하는 공인회계사들의 결의가 담긴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더 투명한 사회와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하사에서 “위원회의 사회적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서울시도 비전을 공유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 ‘ACE 유럽방산TOP10 ETF’

시총 상위 10종목 투자… 23일 상장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는 23일 ACE 유럽방산TOP10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8일 밝혔다.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에 상장된 종목 중 방위산업 매출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종목 편입비는 매출액 성장률 예상치 등을 종합해 결정하며, 종목당 최대 20% 수준까지 편입할 예정이다. 기초지수는 ‘NYSE FactSet Europe Defense

Top10 Index (Price Return)’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유럽 방산기계에 주목한 이유는 ‘성장성’이다. 글로벌 안보 지형이 변화하며 유럽 국가 상당수가 방위비를 증액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550억 달러 수준이었던 유럽의 방위비는 오는 2029년까지 8712억 달러로 약 145%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14%)이나 중국(40%) 등 국가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는 셈이다. /허정윤 기자